

# “태풍 피해조사 철저·신속 복구”

### 김 지사, 재난안전본부서 피해 상황 대책회의 해남·보성 등 현장 잇따라 방문 농어민 위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상황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김 채모 피해와 벼 쓰러짐 피해 등을 입은 해남과 보성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이번 태풍으로 3일 오전까지 집계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83동, 벼 침·관수 914ha, 벼 쓰러짐 846ha 등이었다.

공공시설은 도로 비탈면 21개소가 유실되고, 저수지 1개소와 하천 1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수산 중·양식시설은 풍랑 주의보가 해제되는 즉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피해상황 대책회의를 열어 “사흘간 300mm 이상 폭우를 동반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전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태풍의 특징·진로 등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태풍 대비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앞으로 가을 태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수산업아 품종 등 작물재배체계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민 발생이 확인될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등 구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농작물 피해는 시간을 갖고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되 농민들과 적극 소통해 피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침수된 벼는 조기 수확하고 산물벼를 등외품으로 정부에서 구매해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요청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달라”며 “농가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친절히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에서 계속 추가 발생해 위협스러운 상황”이라며 “전남도 태풍으로 인해 씻겨나간 생석회 재도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가용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미등록 돼지농가를 신속히 파악해 차단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발생한 보성 겸백면, 해남 여란항을 잇따라 방문, 주민과 농어민들을 위로했다.

저수지 방수료가 유실된 해남 계곡면 사촌저수지와 도로 사면이 유실된 보성 겸백면 지방도 843호선 응급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올 들어 전남지역에 직간접 영향을 준 태풍은 ‘미탁’을 포함해 현재까지

7개다. 예년 평균 3~4개보다 2배 정도 많아졌는데 이 가운데 다니스(5호), 링링(13호), 타파(17호)가 피해를 남겼다.

특히 ‘링링’은 상륙하지 않은 채 서해안을 타고 북상하면서 10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고 벼·과수 1만여 ha가 도복·낙과 피해를 봤으며 양식장 등 수산시설에도 30억원의 피해를 냈다.

또 지난 9월 22일께 북상한 타파는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도 남겼다.

재산피해액은 11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김영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오전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김 채모시설 훼손피해를 입은 해남군 송지면 여란 앞바다를 방문, 피해현황을 살피고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전남 산학R&D 예산비중 4.1% 불과” 송갑석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필요”

광주·전남지역의 정부 산학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전국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R&D 총예산은 13조3,800억원이다. 이중 4.1%인 570억원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8.8%의 예산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약 14배 적은 수치다.

호남권에는 수도권의 8분의 1 수준인 7.4%(1,021억원)가 투입됐고, 영남권은 20.4%(2,803억원), 충청권 10.3%(1,412억원), 강원·제주에는 3.2%(43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현정 연



구자들은 지방대학의 인력난, 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지역불균형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대학들은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소외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역 산학R&D 예산은 산업육성 계획에 따라 배분돼 지역산업과 호흡을 맞추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지방의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무조건적 예산증액이 아닌 수혜대학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 투입률 13.9% 저조” 최경환 “문화전당만 밀령...문화도시 인프라 없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남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위해 투입된 국비는 계획대비 83.6%이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3,807억원 대비 13.9%인 1,915억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성사업이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문화권 사업과 같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1조7,259억



원) 사업,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1조4,467억원) 사업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민자 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결성된 1호·2호 투자조합에 이은 3호·4호 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하다”며 “조성사업 종료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이지만 문화전당만 있지 문화도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는 마련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정기 브리핑

### 장병완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현실화”

대안정치연대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현재 보육 정원에서 현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은 8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컸는데, 지난해 수도권 어린이집 총원률은

84.8%인데 비해 지방은 78.9%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광주는 7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장 의원은 “저출산으로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가 줄면서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면서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원하는 경우 아이 보육을 위해 먼 곳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등 보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황주홍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이끌어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고흥·보성·강진·장흥) 위원장은 잇단 태풍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관철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황 위원장은 농가를 방문해 태풍 피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규격을 신설해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가격은 품질을 감안해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태풍피해 벼 전량 매입 추진은 당연한 조치다”면서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면적은 2만6,798ha나 되고, 정부매입이 안 되면 저품질 쌀이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며 환영했다.

### 이개호 “강소연구특구 지정조건 지방에 불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이 지방에 불리해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세부조건,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에 대한 기본역량, 배후단지와의 이격거리 등의 기본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최소 역량조건인 연간 R&D인력 300명, R&D투자 210억원, 특허출원 115건, 기술이전 20건, 기술이전액 2억3,000만원을 충족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핵심기관 배후산단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강소연구특구 지정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현재의 지정요건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선 정량조건과 이격거리제한 조항을 완화해 지방에도 지정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소연구특구 지정 사업은 기존 특구 성공모델 확산과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지정·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 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 태양광발전사업(RPS)인허가, 시공, 토탈 컨설팅
- 태양광 조달우수업체 및 MAS(다수공급자)등록업체
- 공동주택(APT)종합감리업, 설계업 1종
- ESS(에너지저장장치) ■ 지자체 융·복합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 세진엔지니어링**  
SEJIN ENGINEERING.CO.,LTD  
HTTP://SEJINENG.CO.KR

본사 : 전남 영암군 덕진면 향월유수동길 101-8  
공장 :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0-1(유촌동)  
TEL : 062-384-6333  
FAX : 062-384-6334  
H·P : 010-3735-7113  
대표전화 : 1588-4556

대표이사 박찬갑

### ■ 주요사업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 전기·소방·기계설비공사업
- ◎ 전기 종합감리업 및 설계업 1종
- ◎ 정보통신 공사업
- ◎ 난방사업(제1종)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조달우수업체(태양광발전시스템)
-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등록업체
- ◎ 공동주택(아파트)설계, 감리업
- ◎ 태양광 발전 설계·감리·시공업
- ◎ 태양광, 태양열, 제조업체(공장)
- ◎ 한전 무정전협력업체(배전간기)
- ◎ 에너지전문기업(ESCO)2종

